

복지·인권운동본부 창립식 & 초청특강

- 일시 : 2006년 1월 12일(목) 오후 7시
- 장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301-82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번지 보문평화집 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331-0094, 팩스 252-6976, 홈페이지 <http://www.cham.or.kr>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역사 •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독재체제 하에서 억압되어 있던 시민 사회 공간이 열리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대변하는 시민운동이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당시 시민운동은 출발부터 그 이념과 노선에 있어서 민중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했고, 민중운동 역시 시민사회에 기반한 시민운동에 적극적인 의미부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는 분화와 대립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행태의 새로운 시민운동체를 건설하자는 문제의식으로 탄생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민사회의 확장이라는 시대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였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새로운 시민운동체 건설 논의를 위해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해오다가 1995년 4월 28일 대전지역의 88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되었다. 창립당시 문민정부 초기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같은 의욕적인 개혁추진이 기득권의 반발로 유야무야되던 시기였고, 30년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던 때였다. 결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운동은 참된 주민자치를 열어가자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 참된 개혁의 힘을 아래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자, 지역운동의 시작이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국가의 횡포와 재벌에 대한 시민의 개입과 실천의 뜻으로 ‘참여’, 지방자치시대를 참된 주민자치의 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뜻으로 ‘자치’, 그리고 학연과 지연 등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뭉치자는 뜻을 ‘연대’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 대전참여자치연대 목적문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인권 존중사회, 정직과 양심이 우선되는 맑은 사회, 모든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사회,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민주사회를 추구하며,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관치와 타율에서 자치와 참여로, 부패하고 닫힌 행정에서 깨끗하고 열린 행정으로, 경직과 비효율적 재정에서 건전한 재정으로, 입시위주에서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성장우선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환경파괴에서 환경보전으로, 분단에서 화해와 통일로 가기위한 여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 순

18:30 ~ 19:00	다과	
19:00 ~ 19:35	<1부> 창립식	
	개회선언	사회자 - 김봉구 위원
	인사말	김형돈 복지인권운동본부장
	참석자 소개	사회자 - 김봉구 위원
	축사	송인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창립취지 및 경과보고	유병구 위원
	조직 및 임원 구성 보고	김형돈 복지·인권운동본부장
	2006년 사업계획 보고	김형돈 복지·인권운동본부장
	<폐회>	
19:35 ~ 19:40	휴식	
19:40 ~ 21:00	<2부> 초청특강	사회자 - 김형돈 복지인권운동본부장
	- 류만희 (상지대 교수)	
21:00 ~ 21:30	종합토론	
	폐회	

■ 목 차

창립식	창립취지 및 경과보고 5
	임원명단 및 조직구성 보고 7
	2006년 사업계획 보고 8
초청특강	사회적 인권을 향한 복지운동의 과제 13
	－ 류만희 (상지대 교수)

복지인권운동본부 창립 경과보고

< 2005년 >

2005. 2.12. 복지포럼 조직활성화 모색을 위한 내부 간담회

2005. 2.23. 복지포럼 임원 간담회

2005. 3.30.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조직활성화 모색을 위한 내부 간담회

2005. 4. 8.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복지포럼 조직활성화 1차 워크샵

2005. 4.27.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복지포럼 조직활성화 2차 워크샵

-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대응책 - 조복현 (한밭대학 교수)
- 지역복지환경변화와 지역복지운동의 과제 - 심재호 (목원대학 교수)

2005. 5.11.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단합대회

2005. 5.30.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복지포럼 조직활성화 3차 워크샵

- 공교육강화 등 교육문제 현안사업 - 김영노 (전교조대전지부 특별정책국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과 한계 - 심재호 (목원대학 교수)
-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 장동환 (변호사)
- 의료문제 등 현안사업 - 유원섭 (을지의대학 교수)
- 공보육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 백경원 (대전참여자치연대 간사)

2005. 6.29. (가칭)복지인권운동본부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

2005. 7.19. 복지·인권운동본부 창립회의

- 복지·인권운동본부로 조직명칭 및 조직구성을 확정하고 추후 창립 기념 행사를 개최기로 결의함.

2005.9.21. 복지·인권운동본부 1차 회의

- 교육예산학교를 진행키로 하며 보건의료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구체적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함.

2005.10.19. 복지·인권운동본부 2차 회의

- 참여복지예산운동을 공모당선 여부를 떠나 진행토록 하며 복지·인권운동본부의 활성화를 위한 모임 추진토록 함.

< 2006년 >

2006. 1. 5. 복지·인권운동본부 3차 회의

- 일정과 장소를 그대로 추진하되 창립식을 먼저 진행토록 함. 「공공보건의료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분야 모니터 활동을 추진하도록 함.

2006. 1.12. 복지·인권운동본부 창립식 및 초청특강

조직 및 임원 구성 보고

■ 조직구성



■ 임원구성

본 부 장	김형돈(서울치과 원장)
사회복지팀	권술룡(대동종합사회복지관장), 권지성(침례신학대 교수), 김명수(청소년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정현(국민건강공단), 김종생(예수교장로회통합 총무), 김현채(대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신현정(한일병원 가정의학과), 심재호(목원대 교수), 오용균(장애인야간학교장), 원용철(벤엘의 집 관장), 유원섭(을지대학 교수), 윤종삼(윤종삼치과원장), 이문희(서울가정의원장), 이병승(대전기독교복지관 부장), 정진일(장애인신문 기자)
사회인권팀	김병구(해우합동법률사무소), 김봉구(대전외국인종합지원센터소장), 송동호(송동호법률사무소),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여운철(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유병구(CNU건축사무소장), 이상욱(대전MBC PD), 이현주(새날합동법률사무소), 장동환(장동환법률사무소), 정성진(한남대 교수)
교육인권팀	김구환(동신고 교사), 김영노(대신고 교사), 박경란(대전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

보고/ 2006년 사업계획

I.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6년 사업기조와 과제

1. 위기의 시민운동 진단¹⁾

ㄱ. 한국사회의 변화

군부독재의 몰락과 정권교체라는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냉전잔재와 지역주의에 기댄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활성화되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구호에서 보여지듯, 정치, 경제, 문화 등 범사회적인 차원의 대규모 기업자본의 시장지배 현상 속에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소비주의가 횡행하고 경쟁주의 담론이 지배적 담론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자본의 지배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인터넷의 확장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보의 과잉과 상업정보의 범람 속에서 공론장이 오히려 축소, 약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에 의한 중앙정부, 지역사회,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ㄴ. 시민운동의 위기

시민운동 초기의 신선함은 사라지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한 거의 모든 의제는 이미 제기되었으며 상당부분 제기한 의제를 입법화하는 성과도 이루어냈다. 반면에 노동력 부족 노령화, 이혼율증가, 탈물질화, 개인화 시대에 맞는 운동의 방법과 철학은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상근활동가의 충원이 어려워지고, 전문가집단으로서 교수, 변호사 등의 참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 단체들 간의 연대정신이 흔들리고 활동가들의 개인화도 뚜렷이 진전되는 반면에 일부 시민단체들의 경우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을 통해 준관변화 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급적 이슈보다는 일반민주주의 혹은 새로운 이슈 제공자로서 시민운동, 권력의 형성과 작동 보다는 형성된 권력에 대한 감시에 치중한 시민운동의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를 시민운동은 맞고 있는 것이다.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0년사 가운데 발췌

2. 2006년 한국사회운동의 국내외 전망

－ 5.31 4대동시 지방자치선거

1995년 이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척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4대 동시 지방자치 선거가 치루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정치 개혁과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 행정 및 의회에 대한 감시견제 및 평가활동, 부정부패 인사를 거르고, 개혁적 인사의 발굴 및 진출, 개혁의제 제시 등의 보다 체계적인 시민운동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번 제4회 지방자치선거는 참여정부 중후반 평가라는 성격과 함께 지방권력구조 개혁이라는 성격, 국민중심당과 민주당의 지역에 기반한 선거결과와 열린우리당의 선전여부에 따라 향후 국정주도권 및 2007년 대선에도 큰 영향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논의라는 단기적 목표를 구축이라는 우리정부의 단기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UN의 대북인권결의안 통과 및 위조달러 마약밀매혐의로 북핵6자 회담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도 북핵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의제개발 및 대책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 고령화 사회와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의 척도인 노인부양비는 올해 12.6%에서 2030년 37.3%, 2050년에는 69.4%로 급격히 높아지며,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33.3%의 2배 수준에 이를 만큼 우리사회의 고령화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지출 등을 나타내는 공공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2070년에는 57.9%로 급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모색방안 등의 적극적인 대책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 국내외 경제전망

2006년 한국경제는 최근 경기회복세의 미약과 대외 여건 불안에 의해 큰 폭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와 달러약세와 국제금리 인상에 의한 국제금융 여건 악화, 고유가 추세지속 그리고 이에 따른 비석유 수출국들의 교역조건 악화와 실질 성장세 둔화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도시개발 및 부동산 전망

행복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붐이 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단위 재개발사업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나 대전충청권의 경우 본격적인 행복도시의 추진으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기타 국내외 전망

주5일제 본격시행과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갈등,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노동현안에 대한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 및 저출산문제, 보수 세력의 능동화, 신지역주의, 이익집단 표출, 사회병리현상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일상화 되면서 사회병리적 현실도 분출할 것임.

－. 시민운동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모색

시민운동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민운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2006년 주요 지역현안

－. 5.31 지방자치 선거

－. 대전시 가용재원(616억) 감소(세입증가폭에 비해 세출수요 대폭 증가)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및 실질적인 도입 촉구

－. 유비쿼터스 전략계획 수립(용역 7억배정)

+ 정산학 공동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력 갖춰야

－. 변화하는 혁신(혁신바람 -> 혁신평가로 변화)

+ 평가를 통해 내실화를 요구하고 시민참여 및 제도에 기반한 혁신요구

－. BRT시범구간 공사착공(하반기)

－. 지하철1호선 부분개통(3월)

+ 지하철 1호선 실태조사(운영 및 이용자조사) 및 경전철 2호선 건설반대운동

－. 대덕테크노밸리 1,2단계 완료

－. 호남고속철 착공

－. 도시기본계획 수립

- + 연구소 토론회 개최(그린벨트문제, 경관문제, 도시교통문제 등)
- 보문산 등 신규 골프장 건설계획
 - + 각종 난개발 문제 대응
- 대전천 생태복원 및 홍명상가 철거계획
 - + 대체도로 및 행정절차문제 제기
- 역세권 개발 본격화(철도공사 등 복합건물 착공 등) 및 우후죽순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 +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지정 요구 등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도입
 - + 서구, 유성구 등 실태조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

4. 2006년도 주요 사업기조

- 잔여적 권력감시운동에서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운동으로의 전환

계급적 이슈보다는 일반민주주의 혹은 새로운 이슈 제공자로서 시민운동, 권력의 형성과 작동보다는 형성된 권력에 대한 감시에 치중한 시민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운동방향의 전환을 위한 기획사업이 요구됨.

- 정치권력에 집중된 기존 권력감시운동에서 사회권력에 대한 견제와 참여로

기존 정치권력에 집중된 권력감시운동은 의제의 고갈과 새로운 지속가능한 권력형성의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미디어 공공성 확보 및 기업감시 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학교, 언론, 기업, 교회 등의 권력화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한 다양한 준비와 기획사업이 요구됨.

- 단체중심 운동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공동체운동 개척

시장지배가 강화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모순속에서 신성장주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장주의 맞선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준비하고 새로운 모델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한단계 높은 시민운동을 위한 강력한 조직혁신 견인

지난 10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기혁신을 본격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민주적 조직운동을 비롯해 세대교체를 위한 신규회원이나 임원을 발굴하는 등의 지속적인 조직혁신이 요구됨.

II. 복지·인권운동본부 2006년도 사업기조와 과제

1. 사업기조

- 1)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구축
- 2)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 3) 시민참여 확보를 통한 시민권리 회복
- 4) 복지·인권운동본부의 운영 활성화

2. 사업과제

1)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구축

- 보건의료분야 감시감독을 통한 공공성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및 방과 후 아동보호 확충
- 교육예산감시 및 학부모참여형 운영위 구성을 통한 교육권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화

2)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 턱없는 주거·도시교통을 통한 사회접근성 강화
- 시민참여형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권 확보운동

- 시민참여복지예산운동 - 교육, 복지, 도시교통 등 분야별 예산참여운동 전개
- 고용불안해소, 개인신용회복, 사회복지서비스 등 일상적 상담서비스
- 청소년 권리선언을 통한 미래 세대와 오늘 세대 엮기
- 531지방자치선거 복지인권공약 제시 및 공약분석

4) 복지·인권운동본부의 운영 활성화

- 분과구성 및 소통모임 진행
-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정례적 교육

초 청 특 강

향후 10년 복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류만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상지대 교수)

향후 10년 복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역에서 사회적 인권 확대를 위한 시민복지운동의 모색—

류 만 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상지대 교수)

1. 들어가는 글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사회운동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유지하는 데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운동영역도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뜨거운 가슴과 열정’ 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가 같이 하는 전문성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오늘날 시민운동이 곧 우리사회의 건강성 지표를 알려주는 바로메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사회복지’를 운동의 핵심영역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시대적 상황, 예컨대 정치적 민주화의 발전, 경제적 풍요(?)와 경제위기(IMF),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복지의식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주목할만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바 있으며, 동시에 다가 올 10년 역시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10년 한국의 사회복지부문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상황을 예측하고, 어떤 변화경로를 거쳐 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복지운동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자 한다.

향후 한국의 사회복지부문의 발전하는 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인을 점검하고, 시민복지운동의 역할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쟁점

1) 저출산·고령사회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이다.

고령화는 곧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양부담의 증가를 가져온다. 2003년 경제활동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19년은 5명당 1명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정치 이해관계의 득실을 계산해야 연금법 개정 시점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2) 여성의 사회적 참여증대와 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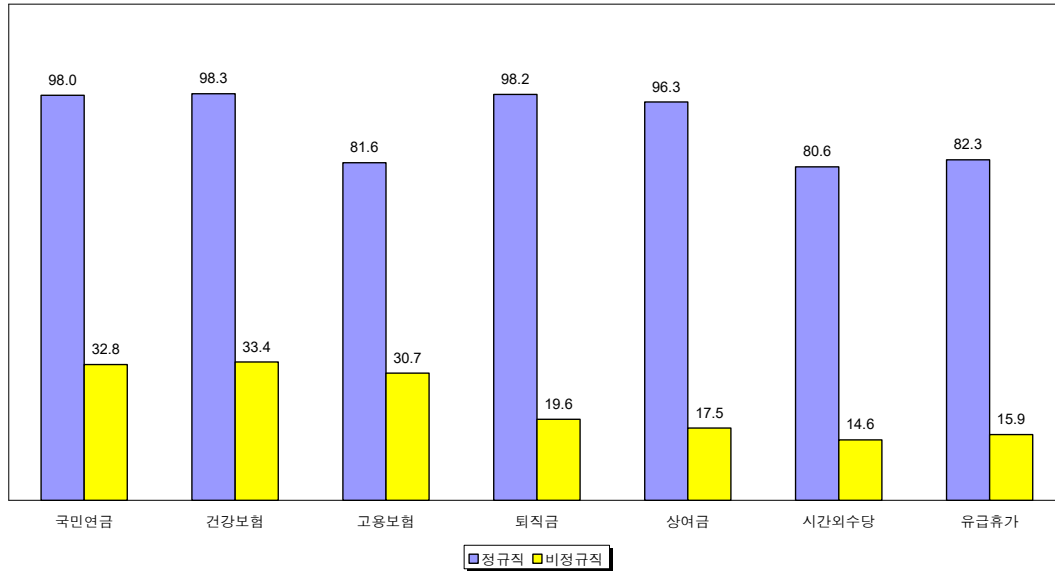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침(2002년 한국 49.1%, OECD 58.1%). 출산, 육아 및 가사 부담이 여성의 사회참여의 장애가 되고 있다. 아동을 낳고 기르는 연령대인 25세-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 M-curve 현상이 나타난다.

아동의 건전 육성, 가족기능 강화 및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보육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필요하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통계청이 2005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0만 명(임금노동자의 56.1%)이고 정규직은 656만 명(43.9%)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2001년 8월 737만명, 2002년 8월 772만명, 2003년 8월 784만명, 2004년 8월 816만명, 2005년 8월 840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8월 56.6%를 정점으로 2003년 8월에는 55.4%로 소폭 하락했다가,

2004년 8월에는 55.9%, 2005년 8월에는 5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98%인데, 비정규직은 31~33%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81~98%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5~20%만 적용받고 있다.

4) 지방화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정치, 경제, 사회적 경색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는 우리 사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방의 복지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복지부문에서 지방화는 그 정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변화는 자치단체간의 서비스 불균형, 불평등의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5) 저성장 경제로 진입과 세계화

더 이상 '한강의 기적'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한국경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장과 복지의 균형 혹은 선순환의 논의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의 발전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인력의 질 향상이 경쟁력 확보의 첩경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가 가져올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인 불평등 심화의 부작용 사이에서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사회복지제도의 수준 향상이 우선적 과제이다.

3. 지역에서 시민복지운동의 과제와 역할

1) 시민복지운동의 ‘지역화’

시(市) 단위에서는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없는 지역이 없을 만큼 활발하게 운동조직이 생성, 소멸되고 있다²⁾.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활동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의 의미는 소극적 의미에서 지리적 경계 혹은 행정적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지역화는 지역의 상황(지역주민의 의식, 복지욕구, 지방정부 등)에 부합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지방정부의 복지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참여정부에서도 분권 혹은 자치 철학을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역할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문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시민복지운동의 전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현재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익히 경험을 한바 있겠지만,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정책의 카운터 파트너로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일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문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강화해야 한다(각종 공청회, 토론회, 정보공개 청구 등). 특히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³⁾. 그리고 조례제정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술이다. 조례제정과 운영감시운동은 향후 지역의 시민복지운동의 중요한 전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2006년 현재 23,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중이며, 10년만에 6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 현재 지방의회의 수준을 볼때, 정치적 역량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적극지원하는 정치적 전술도 중요하다.

지역에서 각종 위원회 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위원, 자문위원, 그리고 조례상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통한 운동의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시민복지운동의 연계화

연계화는 정보공유와 같은 낮은 단계부터 공동의 정책목표를 위한 활동과 같은 높은 단계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내 시민사회운동단체간의 연계와 지역간 시민사회운동단체간의 연계 모두를 의미한다. 연계화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단위에서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역량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과 겹으로만 시민사회운동단체로서 모습을 보이는 불량한(?) 단체의 자정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치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제도적 개입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아동, 노인, 보육 등의 영역이다. 이 같은 정책대상 혹은 서비스 욕구집단은 지역 상관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의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은 인접지역으로 서비스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과정에서 운동단체간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수준의 균일화 혹은 특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성의 강화

역량과 열정을 가진 1, 2명의 핵심간사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의 한계는 아마도 현제도 절감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이 취약한 운동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사회복지부문은 예산이 정밀한 부분에서 정책시행이 야기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를 예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최근 박원순 변호사가 ‘희망제작소’를 통해 전문적 정책 생산을 새로운 형태의 운동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전문성 강화의 문제는 중앙, 지방에 상관없이 현실적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능하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 내 소장 연구인력을 활용하고, 지역 내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 등 인력풀을 구성해야 하는 동시에 내부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의 워크숍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제(agenda)를 개발하고, 해결하는 선도적 입장에서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 구조에서 활동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전문성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4) 대중성의 강화

전문성과 동시에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전문성과 대중성은 상호보완적 개념구도를 갖는다. 대중성의 정도는 적어도 운동의 자생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예컨대 인건비와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가시적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지역주민을 운동의 대상화시키지 말고, 운동이 주체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운동 marketing이 필요하다. 지역 내 여론주도 기관과 공동사업을 수행, 그 동안 관성적(?)으로 발행되어 온 소식지를 탈피한 활동보고서(안내서)의 발행 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흔하디흔한 입후보자의 공약분석을 통해 일반 시민의 정치, 복지의식이 고양시킴과 동시에 운동 주체의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4. 나가는 글

향후 한국의 사회복지변화는 그 동안의 변화에 견줄만큼의 또 다른 형태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복지운동, 특히 지역에서 시민복지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 등에 정치적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적 경향성이 우선적으로 제도 혹은 정책의 변화 접점으로 설정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영역이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기반한 서비스에 제공은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복지운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운동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각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